

# 이재명 “정부·여당 거꾸로 간다…퇴행·독주 막겠다”

### “국민 삶 위할 땐 협조…국민 삶 망칠 땐 맞서겠다” “통합된 민주당 만들 것…다르다는 건 시너지 원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8일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퇴행과 독주를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육경기장에서 열린 8·28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불평등인데 지금 정부 여당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유능한 대안정당을 만들겠다. 약속은 지키고 실적과 성과로 유능함을 증명하겠다”며 “합리적이되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정부 여당에 먼저 나서서 협조하겠다”며 “그러나 역사를 되돌리고 국민의 삶을 망치는 퇴행과 독재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사당화’ 논란을 의식한 듯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며 “나와 다르다는 것은 배제나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 당의 지지를 넓히고 높여가는 시너지의 원천 아니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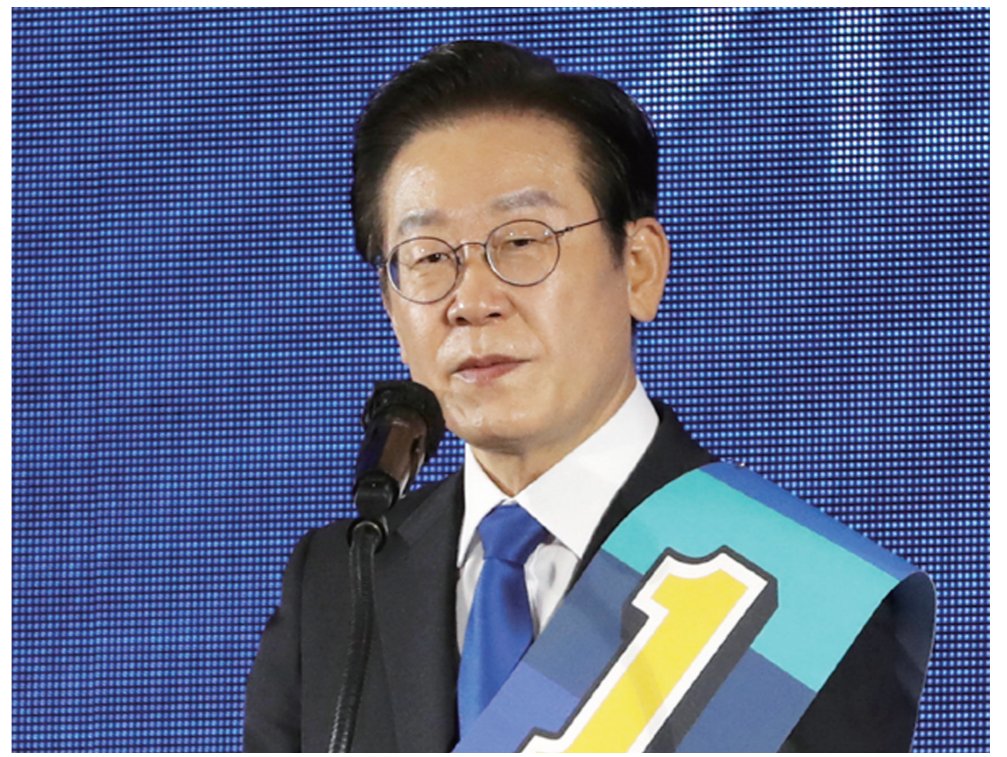
그러면서 “저에게 민주당의 책임을 맡겨주신다면 실력에 따라 사람을 쓰고 역할을 부여하겠다. 역량 있고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누구나 민주당의 공천시스템에 따라 확실하게 기회를 받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통해서 갈등과 분열을 막아내고 통합의 시대에 단결된 민주당을 확실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저 이재명은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원한다”며 “저 이재명에게 필요한 것은 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당을 만들어낼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박용진 후보 간 ‘2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6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선 권리당원 지역 순회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가 78.22%(33만5917표), 박 후보가 21.78%(9만3535표)를 각각 기록했다. 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이 후보 82.45%, 박 후보 17.55%였다.

최이슬 기자



##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2027년 완공… 다음달 추진단 발족

###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 정부세종청사 1동 사용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고 오는 9월 추진단을 발족한다.

28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며 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맡는다.

정부는 우선 건립방안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특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을 거쳐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정한다.

또한 2023년 기본계획 수립 후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정해 올해 정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하고 당정 간에 합의했다.

제2집무실은 2022년 대선 공약에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방안을 검토해 지난 7월 26일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됐다.

제2집무실 건립이 가시화되자 관련 부처의 행보가 바빠졌다.

‘행정안전부’는 임시 집무공간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 빈도를 한층 높여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1동에는 국무회의장을 비롯한 집무 공간과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세종청사 건립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세종 집무실 이용 빈도가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오는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특히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세종청사와 연계성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 ▲보안을 고려하되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 등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건립한다.

최이슬 기자

## 與 “당헌·당규 정비 후 새 비대위 구성”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5시간여 동안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선 “과거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현재 비대위를 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신청 및 항소 등 불복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 수습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권 원내대표의 거취는 사태 수습 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해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겨냥한 ‘양두구육’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조속

히 처리하라고 당 윤리위원회에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법원의 가처분에 따른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6개월 직무정지를 당한 사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 전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며 “이에 대해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전 대표에게 강력 경고하는 바이며, 윤리위에 제기된 추가 징계요구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 앞서 비대위원·중진의원 간담회를 연달아 열고, 지도부 공백 사태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비대위 체제 유지 방안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토론 끝에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우리에게 여러가지 선택의 가능성을 검토해봤는데, 전국위가 비대위를 만들므로서 최고위는 해산된 상태다. 거기로 돌아갈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